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도서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2월 5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계획(안)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도서관 육성과 진흥에 대한 도서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망을 기반으로 각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서관 진흥 정책을 종합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관 건립지원에 769억원,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확충에 228억원(1995~2001)을 투입하는 등 도서관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267관이던 공공도서관이 2001년에 485관(건립중 포함)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대 부족한 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 도서관을 지식정보유통의 핵심기관으로 활성화시키고자 2000년부터 관계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 정보화기반 조성 및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수립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주도하여 도서관계 전문인사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기본방향 및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정책으로 연계되어 그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및 대학도서관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효과적인 정책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부문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도서관 관중 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운영활성화 등 도서관의 조직·기능·인력·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도서관발전의 법·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서관정보화 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단계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재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진중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6개 부처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4월 3일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 및 관련 부문의 각계 인사들에게 정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등 계획 수립에 바라는 바를 알아보았다. ■ 편집자 주

[기획]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신명이 담긴 도서관 발전계획을 기대한다’

① 총 괄

이 용 남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우리는 아직 사회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합의와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도서관은 여전히 잘못 이해된 채 ‘미완의 스타’로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과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정책 입안에 앞서 우리 사회 속에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가치, 가능성 등에 대한 사회의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 정책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정책의 방식도 변경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자기 지역에서의 도서관 서비스 확충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을 지역과 협의하여 가장 최선의 도서관 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수립과 집행을 바라면서 몇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430여 개의 도서관으로는 너무도 부족하다. 따라서 도서관 수를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권 안에서 도서관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한 건립 방식의 정책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기존의 지역 내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고와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등을 도서관 서비스 거점으로 삼아 이들을 지역의 공공도서관들과 연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서관망(Library Network)을 충실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도서관들 자체의 능력부족, 각종 행정적이며 재정적인 한계 등 때문이다. 이번 계획과정에서는 이미 잘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도서관 증설과 서비스 확충이 정부 전체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이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장서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시민들이 도서관을 일상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못지 않게 도서관의 핵심적인 힘의 근거인 자원(장서)을 확충하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살아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이를 보존하고 활용토록 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도서관에서의 정보화 기들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가져다 쓰는 도구가 아니라 지역과 이용자 개개인이 스스로 정보의 발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보화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너무도 부족한 도서관들의 장서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늘려갈 수 있도록 긴급한 재정투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도서관에 좋은 책과 자료가 넘칠 때 도서관은 비로소 지역의 지식과 정보, 문화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셋째,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가장 작은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문화기관이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도서관의 봉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어린이, 학생이나 주부 등에만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노인이나 장애인, 기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도서관을 찾아올 수 없는 주민들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우들이 별도의 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개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시설은 좋은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넷째, 재정확보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입안되어야 한다.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계획의 수준과 범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재정부담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간부문의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참여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의 정부 정책에서도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 사람에 대한 구체적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도서관이 늘어나는 만큼 직원의 증가는 필수적이겠지만 기존의 직원들을 포함해서 도서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이 주어질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존의 도서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슬하게 지적되어 온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도서관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나 관습을 개선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인들도 스스로 자기 개혁적 과제를 정하고 신념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도서관 발전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최근에는 문화관광부도 지원하고 있는 독서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시민단체나 신문과 방송매체에서도 도서관과 독서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때에 도서관 발전계획을 세우기로 하였으니,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계획에 영향을 받는 제반 영역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공동의 신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쉽지 않은 정책적 결단을 내린 정부에 감사하며, 정부는 물론 시민과 도서관인 등 모두가 성공적인 도서관 발전을 이루겠다고 의기투합하는 신나는 분위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좋은 도서관에서 행복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꿈꾼다.

[기획]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국립중앙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② 국립중앙도서관

이 숙 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장)

오랜 역사에서 그래왔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도 지식정보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도서관이다. 그 중 국립도서관의 국내 도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발전 방향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88년 남산에서 현재의 서초구 반포동으로 신축 이전하던 당시에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도서관정보망 종합발전계획 등과 같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마련할 계기는 갖지 못하였다.

이제 금년에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에서 도서관정책개발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국가지식기반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문헌은 물론 외국의 주요 자료들을 포맷에 관계없이 수집하고 이들 자료들을 전자적 환경하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발전 정책은 무엇보다 새로운 정보환경과 전자출판물과 같은 정보매체의 변화를 고려한 자료수집, 이용, 참고봉사, 보존 그리고 직원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도서관과의 협력은 물론 지원에 있어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 내용은 다른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서, 목록작성, 참고봉사, 대출 등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도서관과도 협력이 가능한 통합적인 도서관 시스템을 구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시설 확충이 도서관발전정책의 중요한 한 장으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보환경과 정보매체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 하여도 책자자료는 계속해서 도서관의 중요한 매체로서 자리 매김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록보존소, 박물관, 사료관 등과 같은 유관(有關) 기관과의 협력이다. 현재 외국의 국립도서관들은 날로 발전되어 가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바탕으로 이들 문화기관과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따라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정보의 공유차원에서 어떻게 관련 기관과 협력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도서관 발전 정책에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계획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획]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지방의 특성이 존중되는 도서관정책을 기대한다’

③ 공공도서관

강 형 일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정책이라 함은 현재의 있는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고자 의도적인 변화를 유인하고 추진하는 기본 틀이다. 도서관 발전정책은 도서관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차원의 계획이라고 하겠다. 1995년도에 개정된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의 서문에는 모든 국가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나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되는 공공도서관 특성상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도서관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1885년에 근대 공공도서관의 시작인 보스턴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운영된 이래로 국가의 중앙정부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1900년대의 적극적인 발전정책으로 오늘날 미국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도서관 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일정수준까지의 진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정책다운 도서관 발전정책은 없었으며 그 결과 공공도서관은 각 분야의 관심에서 거의 제외되어 온 공공분야인 듯 싶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어느덧 우리나라 산업분야 가운데 반도체나 조선산업에서는 세계 1위도 나오고 자동차생산도 세계 5위가 되었고 88올림픽을 개최하며 체육한국을 지향하자 올림픽 성적이 10위권으로도 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공립공공도서관 수는 26개관, 1관 당 인구는 무려 40만 명으로 도서관 분야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 일본의 수도 도쿄는 공립공공도서관이 389개관으로 1관 당 인구는 3만 명으로 연간 시민 1인당 5권을 대출하는 반면 서울시민은 1인당 연간 0.5권을 대출하여 도쿄의 10%수준에 불과하다. 이 수치들은 실제로 도서관 수와 이용수준은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서관 발전정책이 있는가, 없는가의 결과인 셈이다.

사회는 항상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야간의 불균형이 정도를 넘게 되면 사회적 불만이 도출되기 마련이다. 2000년 2월 우리나라 도서관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도서관정보화대책을 지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그 당시 언론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대부분의 분야가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반해 도서관은 시스템이나 하드웨어 모두 산업사회에 머무르고 있고 그나마 도서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서관에 가기도 어렵고 설사 간다고 해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언론 보도가 시작이었는데, 과거 같으면 민원서류 여러 장으로 끝날 일이지만 정보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여러 사람의 불편은 금방 실시간으로 퍼지게 되고 방송매체의 힘으로 전국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대통령도 우리나라 공공도서

관 정보화수준이 낙후됨을 알게 되고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지식정보화를 지향하는데 있어 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서관은 정보화시대를 뒷받침 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는 것”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지시하게 되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해 3월에 3,068억 원이 투자 되는 도서관정보화추진 종합계획이라는 도서관발전 정책을 보고하고 지금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느끼는 이용의 불편은 거의 변함이 없는 듯 하다.

최근 KBS, MBC의 책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각종 언론들의 도서관 혹은 책 관련 기획연재기 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중앙일보의 “도서관을 늘리고 책을 채우자”라든가 문화일보의 “다시 책이다”와 같은 기사들은 작년 8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라든가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활동 때문이다. 이러한 언론매체와 시민단체들의 도서관 관련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가 발전한 것처럼 공공도서관도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및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여 달리는 욕구의 표시인 셈으로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1년까지 공공도서관의 수를 420개에서 750개로 늘리는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하고 종합적인 발전정책을 현재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제시될 정책도 불과 수십일 만에 기획된 도서관정보화사업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획일적인 정책이 될까 우려된다. 특히 지식 정보화사회의 특징인 다양성과 지방의 특성이 존중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도서관 발전정책을 기대하여 본다.

(기획)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대학도서관 역할 제고 방안’

④ 대학도서관

백 항 기

(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 부장)

도서관은 선대의 인류문화 유산을 유지 계승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적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그들의 내부 환경요인과 사회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지식정보사회, 지식기 반사회 또는 지식경영시대로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에 있어 주요 지식 정보원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현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란 컴퓨터와 정보관련기술, 통신과 네트워크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발생된 모든 관련된 정보들을 창조하고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사회전체가 정보의 가치를 평가해 나가는 사회를 말한다. 즉, 정보기술 기반 위에서 어떻게 좀 더 질 높은 부가가치 지향의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할 것인가 하는 지식경영이 중요시되는 사회이다.

지식경영은 비슷한 관심과 욕구를 가진 인간과 조직의 커뮤니티(communit) 안팎을 가로질러 값진 정보, 전문 기량, 통찰력의 창출, 축적, 공유를 지원한다. 많은 지식경영 시스템은 인터넷 기술로 활기

를 띠게 되지만, 기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영은 인간, 업무 관계,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정보와 인간행동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동하는 팀워크, 협력, 개인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문헌정보학자 세일라 코털은 “지식경영이란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목적(遊牧的)인 정보관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전 사례를 조직학습문화와 결합시키는 관리철학”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대학이 웹을 이용하고 인트라넷을 보유하여 정보관리를 위한 공동 아키텍처와 집중형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또한 분산된 정보를 규합하여 웹에 올리게 하는 것이 지식경영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식의 저장이 아니라 활용에 있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대학 내 학문과 문화의 구심점으로서 대학도서관이 바로 서는 길을 모색하고 대학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협력망 구축을 위한 단위 도서관의 역할 모색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마다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를 받는 도서관 나름대로 유효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간 협력망을 구축하여 단위 도서관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한다면 국가차원의 망라적인 정보자원 수집도 가능하고 또한 분담 수서, 아날로그 자원의 분담 디지털화 및 메타데이터의 분담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도서관간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둘째, 도서관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도서관업무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견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정보자원의 수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현행의 부속기관 체제로는 학내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자원조차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부서 또는 총장 직속기구로 개편되어 아카이브(archive) 기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직개념의 도서관장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데 그 해결방안으로는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직제를 도입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당국 및 교수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요구되며 사서의 분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식경영시스템으로서의 도서관 구현이다. 오늘날 대학도서관은 어떠한 하이테크·디지털도서관 체제를 구축해야 하나, 인쇄매체와 디지털매체의 상호보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어떻게 유통시켜야 하나 및 도서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를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도서관 운영방침이 정립됨으로써 도서관을 특성화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는 물론 인터넷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서의 전문성 제고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앞으로 사서는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및 종합할 수 있는 정보처리 능력과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생산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무순환제도가 지양되고 주제전문사서 육성방안이 확립되어 네트워크 상에서 지식과 정보를 관리하는 네트워크(networker), 오케스트라에서의 지휘자 또는 비행기 조종사와 같은 지식정보관리인,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정보분석가 및 특정 주제분야의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또한 직무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평가에 의한 보상과 승진체제를 개발함으로써 자기계발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저작권법의 개정이다. 현행 법 체제하에서는 어느 도서관도 디지털콘텐츠를 구축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며, 설령 구축한다 하여도 단위도서관은 도서대여점으로서의 전략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만 있으면 되고 도서관은 없어도 된다는 망언이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 이제 아날로그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깨어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2000년 계획된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이 순조롭게 완수되어, 집에서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자, 정보생산자, 정보공급자 및 도서관관계자간에 정보생산자와 정보공급자의 재산권은 물론 국민의 정보이용권도 확보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획)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이제 인력지원에 주력할 때가 되었다’

⑤ 학교도서관

이 경 희
(잠실여고 사서교사)

학교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6개 시·도교육청당 6개교씩 총 96개교의 학교도서관이 디지털자료실 시범설치학교로 지정되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정보센터로서 거듭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등 21개교에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595개교에 도서관운영활성화 지원을 하여 안팎으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지원팀의 협조가 있었고 제7차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종합센터의 건립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불과 1, 2년 사이에 지난 50년과 맞먹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였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1년 전에는 교실 반칸에서 컴퓨터 1대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도서실 전용 서버에 최신 기종의 컴퓨터 수십대와 대형의 멀티비전 TV 등을 지원 받아 인터넷 활용수업을 꺾하고 있다.

요즘 사회 분위기도 각 방송사마다 앞다투어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백화점의 구매고객에게 최근 베스트셀러 도서주기, 전동차를 이용한 독서열차 등 도서관과 독서진흥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어 우리 사회가 '책 권하는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음을 말한다. 도서관의 요소별 비중은 시설이 5%, 자료가 20%, 담당자의 업무가 75%라고 한다. 이제는 이 모든 시설과 자료를 관리하고 운영할 전담 인력에 투자 할 때이다. 교무부장의 일환으로 1년 단위의 도서실 담당자나 타 교과교사의 전과가 아닌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전담 사서교사의 피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 발전정책의 첫째는 사서교사의 배치이다. 디지털자료실 설치 학교나 학급수가 많은 학교 또는 장서수가 많은 학교 등등으로 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 점차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

해야 한다. 둘째는 학교도서관법과 교육관련법규들의 제·개정이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도서관의 시설설비, 자료 및 전담인력등의 관계조항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교육관계법령으로 위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화되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사서교사의 배치를 임의조항으로 제정하여 법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가 주축이 되어 마련한 학교도서관관련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는 시·도교육청과 지방교육청에 사서교사의 업무를 비롯하여 인사, 예산, 조직, 관리,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는 학교도서관지원과가 설치되기를 바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정책국 조정2과에서 초·중등학교 도서관의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부서나 전문 장학활동이 없다. 사서교사 출신의 학교도서관 전담 교육연구사를 선발하여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업무를 통합하고 전담하여 학교도서관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획]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사립·전문도서관에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⑥ 사립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이 영 주

(한국사회과학도서관장)

우리는 지식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도서관은 지식 정보화와 지식 기반사회의 핵심시설이다. 이런 도서관의 중요성을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인식하고 다양한 도서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 1인당 장서수를 평균 0.52권에서 2011년까지 1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999년부터 공공도서관에 자료 구입 예산을 확대 지원해왔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도서관 자료의 특성화 사업이나 시범도서관 지정 사업과 같은 중점 지원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0년 3월에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분야에 2002년까지 3,068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도서관 발전 정책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의 디지털 환경조성을 위해 2002년까지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의 컴퓨터 장비 확충과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전문도서관 성격의 한국사회과학도서관(필자가 재직하고 있는)에서도 문화관광부에 ‘디지털 자료실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사립공공도서관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어디에도 사립도서관은 정부의 도서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없는데, 실제로는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밀려 차례가 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도서관정책 수립을 위한 어느 공청회에서 사립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가 주최측으로부터 법과 제도상에는 사립도서관에 대한 예외 부분이 전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법과 제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공공도서관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을 설립 운영한지 20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정부에 대한 지

원 요청이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관련 법과 제도의 운영, 그리고 도서관 지원 정책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공립도서관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재정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운영된다. 사립도서관만이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사립도서관 가운데는 지금 도서관들이 하고 있는 특성화와 정보화를 일찍이 선도해 온 도서관들이 있다. 이 도서관들은 특성화를 추구하면서 도서관 전산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사립도서관은 정부에서 공익의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개인이나 민간 단체, 기업에서 대신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것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혹은 개인의 재산을 사회에 희사하여 도서관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전문도서관 성격의 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설립자의 특별한 사명감과 의지가 아니고는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최신 전문 정보자료를 구입해야 하고, 새로운 정보봉사 방식의 개발과 최신 시설의 설치 및 전문 인적자원 보유에 필요한 도서관 예산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벅차다. IMF의 경제 상황에서 존폐위기를 극복하고 어렵게 사회에 봉사해 온 사립도서관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도서관 진흥정책을 수립하면서 정보와 지식을 통하여 모범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사립도서관들을 격려해주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독지가들이 사립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기획]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향후 특수도서관에 대한 발전 방안’

⑦ 특수도서관

육 근 해

(한국점자도서관 사무국장)

장애인을 위한 도서 대출 봉사는 1945년에 시작되었고, 최초의 “점자도서관”의 설립은 1969년이었으며, 특수도서관의 설치 등록에 관한 법령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이 처음으로 1979년 ‘한국 점자도서관’ 이 점자도서관 제1호로 등록한 이후 23년이 지났다. 현황으로는 1998년 이후 급격히 점자도서관이 증가하여 30여 개소로 증가되어 정부와 사회에서는 장애인 도서관이 큰 발전을 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 내면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 이유로는, 1) 1977년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설립 허가가 나다보니 도서관이 아니라 문고의 수준이고, 2) 양산된 문고는 이용자 확보와 도서량 증가를 목적으로 문학류의 도서가 80%이상을 차지하고 또 베스트셀러에만 편중되게 제작함으로 해서 녹음의 경우 7~8개소에서 중복제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전문지식을 위한 장서개발과 전문 참고봉사는 전무하고, 도서의 전산화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 4) 그 특수자료의 이용도 시각장애인에게만 한정하고 있다. 5) 정부의 정보화, 디지털자료실 구축, 평생학습 등의 정부의 정책에서도 장애인을 대응한 구체적

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6)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망에서도 특수도서관은 제외되고 있다. 7)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¹⁾을 위한 봉사는 전국 420여 개의 도서관 중 30여 개소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서 우리는 특수도서관의 이용대상을 독서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우선 정의하고 향후 특수도서관에 대한 발전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① 국립특수도서관 건립

국립특수도서관에서 특수자료의 80%를 제작하여 지방과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특수자료 및 특수기기의 개발을 적극 주도하며, 지방거점의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열람실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시스템으로 특수자료의 공급과 대출, 정보화, 평생학습 등의 운영을 획일화, 체계화한다. 장애인이 소장하고자 하는 특수자료를 일반자료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지방 거점 특수도서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수도서관을 광역시와 각 도에 설치하여 그 지방의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의 전문 참고봉사를 하도록 한다. 지역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들의 지식향상에 기여한다.

③ 공공도서관 장애인열람실

일부가 아닌 전국 공공도서관이 장애인에게 열람봉사를 함으로 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한다.

(기획)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사서의 권익 향상과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자!’

⑧ 전문직

곽 동 철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우리 모두는 ‘사서’라는 동지애를 갖고 미력이나마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누가 알아주건 그렇지 않건 간에 묵묵히 도서관을 지키며 이용자에게 봉사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존의 의식을 새로운 의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만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내일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운명처럼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명을 개척하여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오늘날 우리 정부도 지식정보사회의 진전과 함께 지식과 정보를 재화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의 창출을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각종 언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국가 정책의 화두로 장식하곤 한다. 그 때마다 도서관의 설립이나

1) 일반인쇄물을 읽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 책장을 넘길 수 없는 사람, 학습장애인, 지적장애인, 문자해독장애인, 누워만 있는 사람, 노인으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책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쉽게 이야기되고 급조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 사서 동지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끼어 들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넓지 않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새로이 소개된 문헌정보학의 역사도 그 도입된 시기가 1957년이니 조금만 지나면 반세기에 이를 정도이다. 또한 그 동안 우리의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는 정사서 28,993명, 준사서 21,261명으로서 전체 전문직 사서들이 50,254명이나 배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 가운데 단지 1,886명의 사서들만이 우리의 전문직 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에 개인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우리의 전문직 단체가 회원들의 회비 납부 비율이 가장 낮은 단체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전문직 단체의 회원 회비 납부는 전문직 종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전문직 단체의 존폐와 직결될 수 있다. 또한 그 납부 실적은 전문직 종사자의 대 정부 목소리의 높낮이를 대변하고 있다. 누구나 식목일에 한 그루의 나무도 심지 않고서 산림의 황폐화를 이야기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느 전문직이나 모두가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회원의 회비를 바탕으로 전문직 단체를 운영하며, 나름대로의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더욱이 각 분야별 전문직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목소리를 각기 전문직 단체를 통하여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유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도서관 진흥이나 국민 책읽기와 관련된 시민운동을 신문과 방송 및 각종 매체의 지원을 받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한 시민운동들로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학교도서관살리기도서관인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다함께 노력하여 사서의 권익 향상과 협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후학들도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여 자랑스럽게 사서자격증을 취득하고, 아울러 졸업하면서 우리의 전문직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첫 출발하는 사회참여에 긍지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도서관들도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정보고회나 신년하례회 및 후원회 등의 행사를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을 활용하여 개최하려는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그 지역사회의 맹장이 아닌 심장으로서의 발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서들은 전문직으로서 권익을 향상시키고 도서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실천적 자세 확립 운동을 합심하여 전개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사서로서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둘째, 현실을 비판하기에 앞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서로를 시기하기에 앞서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실을 회피하기에 앞서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사서 권익 향상과 협력 강화를 위한 법규적·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아울러 행정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그 기반을 확충하는데 목표를 두고 다함께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서직의 노력을 충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획)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비라는 바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발전 정책’

⑨ 국제교류

정 동 열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국제화·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 각 국은 국가 총체적인 지식과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지식기반사회를 확충하고 지식강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관리 체제를 구축 시 선행되어야 할 정책이 바로 도서관 정보인프라의 활성화이다.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ICT 친화적인 학교도서관 확충, 대학에서 학술·연구부문의 정보화를 주도할 대학도서관의 디지털화 확대, 지역주민의 정보·문화 및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지원 강화, 그리고 산업 현장의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도서관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서관 정보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지원활동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구촌정보기반사업(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싱가포르의 정보화계획(Information 21 Master Plan), 핀란드의 정보통신기술계획(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Plan) 등에 도서관 정보화 정책이 중심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유통의 공간적·시간적 장애가 제거됨에 따라 지식과 정보는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정보의 독점화나 이용 제한에 따른 정보 불평등(digital divided) 현상 등 제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정책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모든 분야에서 전문직의 국제적 협력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과 정보의 문제를 다루는 도서관 협력 문제는 국가 간에 매우 중요한 화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적인 비전과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도서관 발전 정책 수립 시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요청된다.

첫째, 국제기구나 국가 간 도서관 정보제공 활동의 연계체제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적인 관심과 정보봉사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다른 국가나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리더쉽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2006년 서울에서 열릴 IFLA 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도서관 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도서관 관계자는 물론 국가, 자치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전 세계 80여 개국의 41,000여 회원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OCLC 도서관 협력망이나, 캐나다를 중심으로 북미와 호주 등 1,300여 도서관이 연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캐나다 도서관시스템과 같은 국제적인 도서관 협력망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정보처리 및 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표준, 절차 등의 제정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간의 정보유통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다는 사실은 그 만큼 연구와 실무현장에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역이나 자관의 정보봉사 영역을 뛰어넘어 세계의 도서관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IFLA나 ALA 등의 국제적인 도서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거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동시에 선진 외국의 한국계 사서와 연계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의 사서들이 국내 도서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기획]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독서진흥을 위한 도서관정책에 바란다’

⑩ 독서진흥

한 윤 옥

(경기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고부가가치를 갖는 것은 지식과 정보이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 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은 산업시대의 문자해독능력에 비견되면서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보 활용능력은 단순히 정보를 찾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찾은 정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찾아낸 정보를 읽고 해독하면서 기존 지식과의 융합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찾아낸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가 무엇이든 그것을 소화해 내려면 ‘읽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것을 거쳐야 창조라고 하는 결과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 국은 교육개혁과 함께 국민의 독서 생활화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으며, 국가 지식정보화의 전략적 기지로서 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Information Power : Building partnership learning〉, 영국의 〈Learning Resource in School〉과 〈Book Start운동〉, 싱가포르의 〈생각하는 학교, 공부하는 국가〉, OECD 교육위원회의 〈학교도서관과 정보자원센터 보고서; 2001〉에 나타난 학교도서관의 ICT 기술도입이나 정보격차의 해소 등에 관한 주요방향 제시 등이 모두 이것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시설인 도서관의 활성화 없이 국가경쟁력 향상은 곤란하다는 인식아래 국민의 독서생활화나 정보 활용에 대한 기초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2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여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과학기

술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관련 정부기관의 국장급으로 기획단을 구성,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수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문화관광부에서도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야말로 범정부 차원에서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시책을 기다리는 마음은 그러나 가법지만은 않다. 해방이후 교육개혁이 몇 번 이루어졌어도 우리의 아이들은 아직도 방과후에 학원을 가고 있으며, 공교육의 붕괴라고 하는 심각한 사회적 병폐 속에 해외로 조기유학을 가거나 교육이민들을 떠나면서 교육개혁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 모처럼 세워졌던 좋은 정책도 물거품이 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사장되는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몇 년 전에 세워졌던 국립어린이도서관 설립계획이 좋은 예이다. 모쪼록 이번 정권 말기에 세워지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도서관활성화 종합시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사장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에 마련되는 정부시책은 정부 각 기관의 이해득실을 떠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됨으로써 실효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마침 몇몇 주요언론매체에서도 독서나 도서관과 관련된 특집기사 및 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11개 단체가 참여한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의 운동이나 34개 단체가 참여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등 독서운동이나 학교도서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시책과 국민적 공감대가 어우러져서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반석 위에 세워지길 기대해보며,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문화의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그것에 호응하는 국민적인 문화의식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적 문화의식은 어려서부터의 가정교육을 통하여 몸에 배지 않으면 갑자기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엄마와 함께 하는 아기 때부터의 독서, 부모와 함께 하는 공공도서관이나 서점의 출입, 학교도서관에서의 정보 활용교육, 직장인이나 주부, 노인층의 공공도서관 이용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독서 및 도서관 이용경험은 국민의 도서관 문화의식으로 뿌리를 내릴 것이며, 이것은 정부의 출판 산업과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에 의하여 더욱 공고히 형성될 것이다. 또한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국민적 문화의식은 정부의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정한 세력이 됨으로써 양자는 단단한 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면서 침대머리맡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독서운동으로서의 한국판 Book Start 운동을 제안한다.

‘책 읽는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정책을 바란다’

노 최 영 숙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국장)

도서관은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도서관 정책은 그 나라의 독서 문화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도서관 정책은 미흡하고 문제가 많았다. 전국 4백여 개소 밖에 없는 공공도서관은 전 국민의 독서 생활을 책임지기에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

하기 짝이 없고, 학교도서관은 없는 것이나 진배없는 상태이다. 2001년 6월 출범한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은 시민들이 주체가 된 최초의 도서관 운동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

첫째, 정부는 공공도서관 증설 10개년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수립하여 '도서관 없는 나라' 50년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정보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의 증설은 '국책사업'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증설 10개년 계획'은 2012년까지 현재 4백여 개소의 공공도서관을 1천개소로 증설한다는 명확한 사업 목표를 담아야 하며, 그 이후의 지속적인 건립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소한 연간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예산 1천 억원을 책정해야 한다.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그 콘텐츠가 빈약하여 어렵게 찾아간들 원하는 책을 만나기 힘든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공공도서관은 책을 읽고 대출하는 곳이 아니라 개인이 독서실로 사용하는 소위 공부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셋째, 정부는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는 교육 정상화와 맞물리는 중요 사안으로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중고 시절 학교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학교 도서관 증설은 교사하고 교실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도서실마저 없애는 현재의 정책 앞에서 우리는 망연 자실할 수밖에 없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읽기의 습관을 제대로 키운 아이들은 졸업 후에 자연히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책 읽는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넷째, 정부는 유능한 사서들을 양성하여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 사서는 단순한 책 분류 기술자나 도서실 지킴이가 아니라 도서관이 구비해야 할 책 목록을 정하고,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이 원하는 책을 찾아주고 독서 지도까지 해줄 수 있는 박식하고 친절한 인재여야 한다. 특히 사서직을 도서관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조항을 피하기 위해 도서관 명칭을 평생학습관, 문화정보센터, 사회교육관 등등의 이름으로 바꾸어 도서관 간판을 내리는 작금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국민들 대다수가 즐겨 찾는 중요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때까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우리 국민들 또한 끊임없이 정부에 도서관 발전 정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기획]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도서관 발전정책은 국가 비전의 설계도이다'

㉠ 출판진흥

백 원 근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의 컴퓨터 황제인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도서관이었다"고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초국적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표이자 정보사회의 가치사슬을 극한으로 확대시킨 그

의 한 마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보사회 발전의 동력은 지식과 창의력이며, 이를 매개하는 핵심 매체가 책이고, 공공재인 책에 대한 접근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이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의 퇴물처럼 여겨지던 책, 사양산업으로 간주되던 출판산업, 언제나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리며 정체성 혼란에 빠진 듯하던 도서관. 그러나 밀레니엄 전환기를 거치며 오히려 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새롭게 책문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더 이상 계량적 기여도에만 있지 않다. 책 문화는 포괄적 의미의 국민의 '삶의 질', 풍요로운 문화 생태환경에서 살아야 할 인간적 권리, 말할 권리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다채롭고 완결적인 매체인 책의 향유는 이제 기본적 인권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기에 모든 사유와 콘텐츠의 기반이라 할 언어문자 그 자체를 내용으로 한 책의 경제적 고부가가 치성이 추가됨은 물론이다.

선진 각국이 책문화의 저작/생산-보급/유통-소비/향수 기반을 전에 없이 공고히 하고 있는 데는, 지식기반 정보사회 발전의 요체가 독서에 있다는 과학적인 정책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서관 및 독서정책은 개인의 삶과 국가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범람하는 영상정보 매체의 역기능이나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탈독서화 추세를 억제하고, 독서 생활화를 통한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한 선진국들은 각종 법제도의 제정비, 도서관정책의 혁신, 독서운동을 통해 독서가 선택의 대상이 아닌 국가 비전의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독서환경의 열악성은 역설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의해 대표되며,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되지 않는 '점차적 개선' 수준의 정책 비전으로는 미래 세대가 세계 경쟁에서 낙오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미국의 일개 대학(하버드) 도서관보다 못한 실정이다. 산업사회 내내 경제/안보 논리의 뒷전에 밀려있던 도서관정책을 전면에 배치하지 않는 한 어떠한 통과외례적 전시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는 도서관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정책적 각성과 철학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나머지 문제는 절반 이상이 풀린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도서관수를 대폭 증설하고 도서관구입비를 혁신적으로 증액하며, 기준 장서와 사서 확보로 각급 학교도서관을 내실화하여 학교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며, 지자체들에게 경쟁적으로 마을도서관과 각종 소형 문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 이용자 중심의 '생활 속의 도서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서관별 독서모임과 독서운동을 지원하는 일 등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리라. 그 동안 아이디어가 없어서 정책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었다. 생존에 바빴던 수난의 역사와 국가정책의 철학 부재에 주원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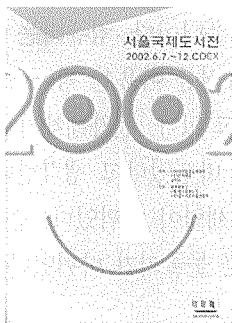
출판계 입장에서는 각종 도서관의 증설과 장서구입 확대 등 선진국과 같은 '시장으로서의 도서관' 기능 못지 않게, 책문화의 한술밥을 나눠먹는 '형식적 가족'이 아닌 '피를 나눈 생존공동체적 가족'을 복원시키는 작업이 도서관계와의 폭넓은 교류협력을 통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독서운동 등 일반 사안에 못지 않게 국가전자도서관 사업의 디지털 콘텐츠 확보 및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관련 문제, 출판계가 추진하는 출판유통 정보화 사업과 도서관의 서지 CIP/DB의 연계 문제, 전자책(e-Book)의 납본/수집 문제 등 다급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내 최대의 책잔치라는 서울국제도서전에 도서관계의 참

여가 없고, 도서관주간 행사에 출판계의 협력이 없는 현실부터 당장 바뀌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출판계와 도서관계, 교육계가 별개의 유기체인양 독립선언을 하고 있는 사례를 선진국에서는 찾기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교류협력의 층위를 넓히고 네트워크를 조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의 영역인 도서관 정책을 방기한 채, 상업성만으로 편식독서를 조장하는 도서대여점을 이의 대응으로 생각하는 정책 판단력으로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어렵고 실현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진정한 신자' 만이 포교에 열정을 갖듯이, 독서와 도서관의 중요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는 책 읽는 정부만이 '진정한 미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다.

2002년 서울국제도서전

6월 7일 ~ 12일, COEX



지식과 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오늘날, 서울 국제도서전의 개최는 국가적으로는 지식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독서 수요를 파급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주)문화방송, 코엑스 공동주최로 오는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2002 서울 국제도서전이 개최됩니다.

※ 우리협회는 연속간행물, 실무참고자료, 단행본 교재자료 등을 전시하는 부스를 운영합니다.

※ '전문인의 날' 6월11일(화) 세미나 개최 예정(COEX 회의실)